



■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도입 관련 보도자료(2015.11.19.)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 교육부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부터 한 번의 원서접수로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힘.
- ▲ 본 단체가 2014년 8월 13일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의 개선방안” 토론회 당시 이 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기대효과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던 10개 기대효과와 4대 핵심기대효과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 ▲ 대표적으로 한 번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원서접수, 대입 통합 정보 및 대입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고교에 진로·진학 상담 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됨.
- ▲ 하지만 여전히 대입전형료 인하 효과, 대학의 행정 업무 경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남김.
- ▲ 원서 접수에서 발생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현 민간 협약방식을 국가적 시스템 운영으로 전환해야 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오늘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부터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전담 조직을 설치해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41개 국립대학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서접수 대행사들(유웨이 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의 가치분

신청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부가 발표한 이 시스템의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제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회를 개최(2014년 8월 13일)해 그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10대 기대효과 중 불가능으로 평가된 5개 항목 중 3개가 가능, 미흡으로 평가된 3개 항목 중 1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부분 개선됨.

사교육걱정은 오늘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내용과 대교협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 당시 요청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불가능으로 판단했던 한 번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는 효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수시모집에서 대학별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통원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했지만 대학별 수정 기능을 탑재해 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험생을 위한 각종 전형 정보 및 진로 진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생과 학부모,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표1의 4번과 8번이 불가능에서 가능) 미흡으로 평가했던 ‘대입지원 및 등록 위반자 실시간 처리’ 기능은 토론회 과정에서 이미 대교협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에 ‘공통원서 접수시스템’과 연동하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표1.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의 기대효과와 가능 여부

구분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의 기대효과	토론회 당시 가능여부	현재 가능 여부
학생 학부모	1 대입전형료 인하 효과	불가능	불가능
	2 한 번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원서접수	불가능	가능
	3 대입 통합 정보 및 대입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	불가능	가능
	4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보호	가능	가능
	5 대입 지원 및 등록 위반자 실시간 처리	미흡	가능
대학	6 ‘최종 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의 행정 업무 경감*	불가능	불가능
국가적 차원	7 정확한 전형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의 질 제고	불가능	가능
	8 편리한 대입원서 지원 체계로 교육행정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	미흡	미흡

*대학 차원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기대효과는 당시 토론회에서 확인한 내용과 대학의 행정업무 경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때 단계별 합격자, 최종합격자, 추가합격자를 통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한 항목으로 병합했다. 당시 기대효과 6은 미흡, 7은 가능, 8은 불가능이었다.

■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적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하지만 여전히 남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토론회 당시에도 불가능으로 판단되었고 여전히 불가능한 대입전형료 인하 효과입니다.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4~5천원에 해당하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수의 국민들은 한 번 접수로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이니 원서접수수료도 1회 내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대행업체와 협약하는 방식인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한 대학의 숫자만큼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수험생의 부담은 사실 약 5천원의 원서접수수료가 아니라 최대 10만원을 훌쩍 넘는 전형료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이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의 당초 계획에는 ‘최종 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학교생활기록부)과 교육과정평가원(수능 정보)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학에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형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교협 담당자는 대행업체와 추후 협의를 통해 원서접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덜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먼저 지원 대학의 수만큼 대행사에 내야 하는 원서접수 수수료의 문제를 한 번만 결제하거나 정액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하겠다고던 ‘최종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고 조속히 시행해 대학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시행 이후 대학은 기존에 이 업무에 지출했던 예산만큼의 전형료 인하를 수험생들에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시스템 운영은 경제적 부담 완화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민간업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대교협은 단기적으로는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서접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공공재의 성격을 갖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 8)'을 통해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한 '최종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3. 대학은 향후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으로 인해 행정 업무 경감이 이뤄질 때 입학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15. 11.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02)